

19. 5月中 住宅關聯 主要 報道內容

資料提供：弘報調查部

〈서울경제 (5/1)〉

- 「대지조성자금 지원액」 5천억으로 대폭 증액...주공, 지자체등에 지원
 - 정부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는 토지개발공사, 주택공사, 지자체등에 대한 올해 대지 조성자금 지원액을 당초 1천6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
- 주택기금 4천억 증액
 -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2조9천억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3조3천억원으로 확대, 운용규모도 2조7천억원에서 3천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증액.
 -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평이하 주택 용자액을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증액.

〈한국경제 (5/1)〉

- 「아파트 분양가·층고, 방향따라 차등화」
 - 서울시는 올부터 시행중인 아파트단지 경관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파트 층고와 방향에따라 분양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.

〈내외경제 (5/2)〉

- 대형건설 아파트분양 저조
 - 4월말 현재 「지역퀴타」 묶여 평균실적 18.4%
 - 년초 사업계획대비 분양실적이 50%이상 되는 곳은 7개사이며 47개사는 분양이 전무한 실정... 1백 17개 지정업체 조사.

〈서울경제 (5/3)〉

- 20만가구 미만도 재건축 허용을
 - 신축시 20호 이상 조건
 - 주축법 개정건의... 서울시

〈서울경제 (5/5)〉

- 토지거래신고, 허가제 정비
 - 농지·임야 「2중규제」 완화.
 - 매매증명제로 충분... 신고절차 생략
 - 가격심사제도 폐지.
 - 국토관리법 개정... 사후감독 강화.

〈내외경제 (5/5)〉

- 대형건설사, 사업 다각화 모색
 - 정부의 건설경기시책 및 주택쿼타제 실시로 주택경기 불황지속 전망.
 - 시설, 레저, 첨단등 주력.

〈한국경제 (5/5)〉

- 중소건설업체 도산위기
 - 토개공동이 공영개발택지의 사용시기를 지키지못해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데다 주택할당제까지 겹쳐 택지대금에서만 년 8%포인트를 더 부담하고 있는 설정.

〈서울경제 (5/7)〉

- 건설경기 진정때까지 건축규제조치 지속
 - 주택물량 할당제도... 최각규 부총리

〈내외경제 (5/7)〉

- 집값 95년까지 떨어진다고...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정책토론회

-년 5%선, 3년 뒤 15%.

200만호건설... 값 안정 본격기여.

<매일경제 (5/8)>

- 「상업용 건축규제 재연장」... 최소한 3개월 이상.

-6월말 시한. 재벌땅 취득도 1년간 연장... 최각규부총리 2분기 경제대책 보고.

<중앙경제 (5/10)>

- 사유지 지하공간 개발... 공공시설용으로 활용

-건설부 지하공개념 도입추진

<서울경제 (5/11)>

- 건설업계 「일감찾기」 초비상

-정부공사 연기. 할당제 실시등 사업물량 격감.

-전담부서 강화등 수주전 치열.

-현장인력도 남아돌아 “처리” 고심.

<한국경제 (5/12)>

- 5·8조치 종결을... 전경련촉구.

-생산 및 영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신규취득및 건물의 신·증축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.

-또한 매각위임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도 요청.

<한국경제 (5/13)>

-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 넘어... 건설부

-4월말 집계... 전월보다 19.1%나 늘어.

<내외경제 (5/13)>

- 「비업무」매각 거래허가 예외조치.

- 건설부...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

- 5·8조치에 따른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5회 유찰된 토지의 경우.

-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임야매매증명 및 택지취득 허가를 받은경우 거주지 제한없이 실수요자의 매입 허용.

<서울경제 (5/13)>

- 대기업 부동산취득 선별 허용... 하반기부터.

- 창고등 물류시설과 신도시내 기반시설등.

- 5·8조치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이 규제된 근린생활 시설과 다세대·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도 적극 검토중.

<한국경제 (5/13)>

- 개발부담금 대상 축소를... 한국주택사업협회.

- 주택단지조성 최소단위 면적인 1만㎡(약 3천평)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해줄 것을 요구하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」를 12일 건설부에 전달.

- 개발이익 산정시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매입가격이 반영되도록 법인 장부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인정해 줄것을 요구.

<내외경제 (5/14)>

- 용적을 제한 대폭 완화.

-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건축물의 용적율제한을 300% 이상에서 400%이하로 크게 완

화...(서울시)

〈중앙경제 (5/14)〉

- 아파트 착공제한 크게 완화.
 - 18평이하 미분양 100가구이하면 소형주택 짓도록 허용.
 - 전용면적 18평이상·이하로 구분. 각 10세대 이하면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했다...20일부터 시행.

〈한국경제 (5/15)〉

- 건설물량할당 하반기 조정...건설부
 - 업계의 건설물량할당제의 탄력적 운용요구에 대해 하반기에 검토 계획.
 - 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의 법제화는 민간계약 관계임으로 고려치 않음.

〈내외경제 (5/16)〉

- 5·8조치 예외 인정
 - 1년 더 연장하는 대신 물류·사원주택용 신규 땅 취득은 허용.

〈내외경제 (5/19)〉

- 택지미분양 확산 ... 토개공 자금부족 심화
 - 미분양택지 111만평, 1조2천억원.
 - 분당, 일산, 평촌등 3개 신도시 미분양택지는 20만3천평.

〈서울경제 (5/19)〉

- 2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... 건설부, 건축 촉진위해 시행령 개정.
 - 현행. 전체면적중 주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이내시 100가구 미만지었을 때 분양가 자율화.

- 50%이상이면 20가구 미만일 때,
- 앞으로 전체면적중 주거면적이 50%미만시는 199가구까지
- 앞으로 전체면적중 주거면적이 50%이상시는 1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.

<서울경제 (5/19)>

- 한국주택사업협회 류근창 회장 인터뷰
 - 주택건설물량 할당제와 미분양확산으로 업계경영사정 악화.
 - 주택 및 건설경기가 진정됨으로 「업계의 자율경쟁을 통한 발전」을 유도해야.
 - 업계도 나름대로 자구노력 강화해야.

<한국경제 (5/20)>

- 신규건설면허 11월 발급 ... 건설경기등 감안, 당초 8월에서 3개월 늦춰.
- 전문업(공사) 신규면허는 당초 계획대로 발급.

<한국경제 (5/21)>

- 「50대기업, 부동산취득 규제 완화」 ... 5·8조치 일부 수정.
 - 창고, 화물터미널 부지등 물류시설용 부동산.
 - 수도권신도시의 백화점, 1천500평이상 규모의 쇼핑센터, 터미널등.
 - 18평 이하의 사원임대주택, 근로자복지주택용지.
 - 25.7평 이하의 사원용 주택.
 - 도시이외의 지역에 짓는 연수원용 부동산.
 -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5·8조치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로 현재 시행중인 상업용 건축규 제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.

<조선일보 (5/21)>

- 「주택건설 9만 7천호로 제한」 ... 2/4분기.
 - 정부는 당초 14만호로 잡았던 2/4분기 주택건설물량을 9만7천호로 줄여 상반기 목표

26만호를 상회하지 않도록 함.

〈내외경제 (5/22)〉

- 건축법 시행령 개정, 내달 실시
 - 도시 25.7평, 읍면 30.3평 이상 주택신축 신고제로.
 - 4층 2천㎡이하 건물은 건축사가 준공검사 대행

〈한국경제 (5/25)〉

- 「건설부, 주택보급율 과대 포장」
 - 90년말 현재 실제로는 64.9%에 불과하지만 건설부 발표는 실제보다 7.2%포인트나 높은 72.1%로 나타남.
 - 그 이유는, 건설부의 경우 주택재고량을 미착공분까지 포함했고 단독세대주를 가구수에서 제외했기 때문.

〈서울경제 (5/26)〉

- 바다 골재채취업자, 염분측정시설 의무화 ... 건설부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
 - 골재 채취기간 : 하천, 바다, 육골재의 경우 5년, 산림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채취 가능.

〈한국경제 (5/26)〉

- 내집마련 「주택부금」 인기 ... 전세자금과 융자 혜택.
 - 가입자 전년비 48% 증가.
 - 4월말 「청약예금, 저축」은 감소.

〈서울경제 (5/26)〉

- 아파트 「무주택우선분양」 채권당첨액 ... 일반보다 고액 기현상.
 - 수서지구 20개형중 12개평형.
 - 적채 많아 무조건 신청 ... 오히려 불리.

<세계일보 (5/27)>

- 신도시·수도권 ... 주민편익시설 전무
 - 상용지 평당 1천만원선 ... 서울과 맞먹어.
 - 쇼핑센터, 버스터미널 건설 엄두 못내.
 - 교통난등 생활 불편 극심.

<중앙경제 (5/27)>

- 종토세 불만 “꿈틀” ... 과표는 올렸는데 땅값은 제자리.
 - 조세저항맨 개발재원 차질.
 - 과표 현실화 재론 가능성.
 - 납부시기 대선 겹쳐 선거쟁점화될 듯.

<한국경제 (5/27)>

- 아파트 채권 관리 허점.
 - 주택은행, 청약서 약정액 확인 않고 판매.
 - 실제 매입액 적어질 소지-대조과정없이 건설사 묵인맨 「부정」.

<동아일보 (5/27)>

- 「서울 아파트 지을땅이 없다」.
 - 대규모 택지개발용 “바닥”
 - 녹지 3백만평 “무용지물”
 - 당분간 재개발만 추진할 듯.

<중앙경제 (5/27)>

- 50대기업 신도시 매입가능 상용지 : 총 21필지 10만여평 규모.
 - 호텔, 문화시설 계속 규제.

-5·8조치 일부 완화 ... 7월부터 신규매입 허용.

<중앙경제 (5/28)>

- 지방아파트 미분양 ... 사업주 도산(중소업체 자금난 심각)
 - 시공대형건설사 공사대금 못받아 낭패.
 - 밀린 공사대금 회수에 총력.
 - 사업자체 인수 ... 자체분양까지.

<서울경제 (5/28)>

-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(서 건설부 장관).
 - 년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.
 - 용도지역 5~6개로 통폐합.
 - 보전 임지에 관한 사항은 산림법에 일임.

<서울경제 (5/28)>

- 6월 분양아파트 전국 3만7천여가구 분양 ... 대형업체.
 - 서울, 수도권 28%
 - 주택공사도 근로복지 등 6천가구 분양.

<서울경제 (5/29)>

- 주거문화 한눈에 「주택공원」 세운다.
 - 성남시 정자공원내 7만1천평규모.
 - 박물관, 만국정원
 - 견본주택종합전시관 오는 6월 30일 OPEN

<내외경제 (5/29)>

- 신도시 7월초 3차 분양.

- 1만3천589가구.
- 27개 업체 참여.
- 일산 : 6천221가구 최대, 분당 : 거의 국민주택초과규모 건설.

<중앙경제 (5/29)>

- 건설노임 상승세 주춤.
 - 일부 직종 5천원 올라.
 - 콘크리트, 배관, 위생공, 인부는 1만원 하락.

<서울경제 (5/29)>

- 1/4분기 GNP 7.5%성장 ... 한국은행 발표.
 - 건설부문 둔화 : 4.3% 상승.
 - 서비스 부문 9.0%, 기술설비투자 8.6% 상승.

<내외경제 (5/30)>

-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면제범위 확정.
 - 각종 개발구역 나대지, 건축허가 불가면 해당.
 - 군시설 관련 금지주택.
 - 신·증축제한 주택부속 토지도.
 - 산림보호 제한지 등 ... 건설부 지침마련.

<한국경제 (5/30)>

- 미분양 땅 매각 촉진 ... 토개공, 「자금압박 해소대책 시행지침」시달.
 - 매각시점의 감정가격이 공고당시보다 낮더라도 지사장직권으로 처리케.
 -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매각토록.

<매일경제 (5/30)>

- 청약저축이율 년 10%로 올려 ... 개정안 마련 7월부터 시행.
 - 가입기간 2년이상인 경우 현행 8%에서 10%로.
 - 가입기간이 1년미만은 연리 2.5%, 1~2년은 5%로 현재와 동일.

〈세계일보 (5/31)〉

- 영구임대아파트, 임대기간 제한 검토 ... 서울시.
 - 자활능력고려 10년~20년으로 제한.
 - 공급한정돼 형평어긋나고 전매우려.

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